

근현대 울산 지역민의 추방과 정착* - 귀환동포를 중심으로 -

차 철 욱**

1. 들어가면서
2. 일제강점기 식민지 농정의 파탄과 이동
3. 귀환동포의 울산 정착과 '棄民'화
4. 귀환동포 없는 '귀환동포' 마을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울산 지역민이 경험한 추방과 정착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분석 대상은 해방 이후 일본으로부터 귀환한 동포들로, 이들은 식민권력과 냉전 권력이라는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본국으로의 귀환을 강제당한 역사적 존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세 가지 분석 축을 설정했다.

첫째, 일제강점기 식민지 농정의 파탄으로 삶을 잃은 울산 농민들은 일본 도항·밀항 및 만주 이주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식민권력과 밀항브로커 등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권력관계에 노출되었다. 둘째, 해방 후 이들은 일본·만주 등 각지에서 귀환했으나,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재일조선인은 GHQ의 송환정책과 전쟁공포, 일본인의 인종적 반감 속에서 귀환을 모색했으며, 귀국 과정에서도 위협과 착취를 경험했다. 셋째, 귀국 후에도 식량난·주거 부재·재산 통제 등 열악한 현실이 이들을 기다렸다. 귀국 후 연고

* 이 논문은 2025년 울산역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로 작성함.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chacw21@pusan.ac.kr)

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산항에 정착한 귀환동포들은 경제적인 곤란을 겪었다. 미군정과 경상남도는 부산 거주 귀환동포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으로 농업이주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울산군 삼남면 황무지로 이주한 귀환동포들은 당국의 허위 정보 제공과 지원 부재, 기존 지역민과의 갈등으로 대부분 정착에 실패했다. 신안마을과 에덴마을 사례는 귀환동포가 '기민(棄民)'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조 조직과 공동 개간, 축산업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생존을 모색했다.

* 주요어: 추방과 정착, 귀환동포, 농업이민, 신안마을과 에덴마을, 기민(棄民)

1. 들어가면서

20세기 전반기 한반도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동이 진행되었다. 제국의 식민권력과 냉전권력들의 지배전략을 목적으로 한 강제성에 기초했다. 민족 해방운동을 위한 해외로의 이주, 조선 경제의 파탄에 따른 생계 목적의 이주, 일제 말 일본 제국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강제동원과 해방 후 귀환동포에 대한 냉전권력의 송환정책, 한국전쟁기 이북 피란민의 추방 등 다양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귀환동포는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에 의해 자신의 삶터로부터 이동을 강제당한 자들로서, 2차세계대전 결과 새로운 지배권력으로 부상한 미국 중심의 냉전권력에 의해 또다시 본국으로 추방당한 존재였다. 해외 조선인들의 본국 귀환은 미국이 일본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공산주의권 진영과 체제경쟁에 대응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지배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만주에 150만 명, 일본에 200만 명 정도 거주했다. 일본의 경우 이들 가운데 약 40만 명은 1939년 이후 강제 동원된 자들이었고, 나머지 160만 명은 1920년대부터 일본으로 건너온 도향노동자들이었다. 그리고 만주에서 생활한 150만 명 중에는 1934년 이후 식민권력이 추진한 정책이민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본고는 귀환동포에 주목함으로써, 식민권력과 냉전권력 등 복합적인 권력 구조가 정착하지 못한 채 부유하는 존재들을 생산해 내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동을 강요받은 주체들이 취하는 대응방식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귀환동포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재일한인 사회의 형성 과정과 재일한인의 지위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연합군총사령부(이하 GHQ)와 일본 정부가 추진한 재일한인정책의 일환인 ‘귀환’ 혹은 ‘송환’ 문제와 관련된 국적 문제가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최근의 국내 연구는 GHQ와 일본 정부의 재일 한인 귀환정책, 그리고 귀환동포의 구호운동이라는 두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귀환동포의 귀환 과정에 관한 GHQ 생산 자료 분석을 통해 당시 GHQ가 구상한 ‘송환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귀환이 진행되었음을 밝힌 연구, GHQ와 일본 정부가 재일한인을 식민지인으로 인식하고 그 지위를 규정한 방식에 주목한 연구, GHQ와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상대로 한 소극적 대응 정책을 다룬 연구가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부산·경남지역과 미군정 산하 구호단체를 다룬 연구, 만주지역에서 이주해 온 동포들의 인천지역 구호활동을 다룬 연구와 같이 구호활동의 실태 파악에 주력한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귀환동포에 대한 구호를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 만들기의 과정으로 해석한 연구, 그리고 미군정기 구호활동이 정치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미약했다고 본 논의로서, 이들 연구는 구호활동이 지닌 정치적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연구 시야를 확대했다.¹⁾

한편 부산이라는 공간과 관련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징용노동자와

1) 최영호,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제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이현주, 「해방 직후 인천의 귀환 戰災同胞 구호활동-《대중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이현주, 「해방 후 인천지역의 戰災同胞 귀환과 사회변화」, 『인천학연구』 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5; 황병주, 「미군정기 전재민구호(救護)운동과 민족담론」, 『역사와 현실』 35, 한국역사연구회, 2000; 황선익, 「해방 후 귀환구호운동의 전개와 미군정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장기간 일본에서 생활한 귀환동포 각각이 바라본 부산의 이미지를 다룬 연구, 귀환동포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추방되었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로 규정하고 그 귀환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식을 살핀 연구, 귀환동포를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시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추방당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기울인 생존 노력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²⁾ 한편 귀환동포의 생존 방식과 관련하여 GHQ와 미군정의 지배전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방법인 재밀항에 대한 연구³⁾는 귀환동포의 연구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지금까지 귀환동포 연구의 공간은 대체로 귀국 직후 정착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시간적으로는 귀국 직후만이 연구 대상이었다. 하지만 귀환동포는 1970년대까지 지역사회에서 호명되고 언론에서 소개될 정도로 긴 시간 우리의 역사 재구성성에 개입했다. 그들은 해방과 동시에 국내로 이주한 뒤 한국전쟁과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줄곧 ‘귀환동포’로 불려왔다. 본고에서 사례로 다루는 에텐마을 역시 1970년대까지 ‘남민마을’로 불리며 주변 마을과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울산 지역민이 경험한 추방과 정착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해방 이후 일본·중국 등지로 부터 귀환한 동포들로서, 이들은 식민권력과 냉전권력이라는 복합적인 구조적 조건 속에서 조선으로의 귀환을 강요받은 역사적 존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세 가지 분석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 귀환동포 형성의 역사적 전사(前史)로서 일제강점기 울산 민중의 해외 이주 실태와 그 구조적 배경을 규명한다. 둘째, 해방 이후 귀환동포의 울산 정착 과정에서 작동한 다층적 권력관계와 이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검토한다. 셋

2) 최영호, 「韓人 歸還者의 눈에 비친 解放直後 부산의 이미지」, 『韓日民族問題研究』 20, 한일민족문제학회, 2011; 최민경,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해방공간 부산」, 『동북아문화연구』 6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1; 차철욱, 「해방 후 부산지역 귀환동포의 이주와 정착」, 『해항도시문화교섭학』 30,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4.

3) 이연식, 「해방 직후 남한 귀환자의 해외 재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만주 ‘재이민’과 일본 ‘재밀항’ 실태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1946-1947-」, 『한일민족문제연구』 34, 한일민족문제학회, 2018.

째, 귀환동포들이 스스로 구축해 나간 정착 마을의 형성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단순한 귀환의 역사를 넘어, 추방과 정착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민중이 생존을 모색하는 능동적 대응 방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일제강점기 식민지 농정의 파탄과 이동

1) 일본 도향과 밀항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해외 이동은 일본 도향·밀항, 만주 이주, 강제동원 등이었는데, 전시체제기의 강제동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촌경제의 몰락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업정책이었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은 토지 소유권에 기반한 지주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소작권을 약화시켜 다수의 농민 몰락을 초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다. 몰락한 조선 농민들의 이동은 이러한 배경과 연동되어 있었다.

울산 범서면 중리에 사는 안복동은 3년 전에 동군 방어진에 사는 일 본인 중총(中塚)의 논 일곱 마지기를 무강(武岡)이와 오년간 소작권 계약을 하고 한 해 농사를 지은 후 소작료 위약 문제로 너마지기를 뺏고 서마지기만 부쳐 오든바 작년가튼 흥년을 당하여 전 소출 스물한 말에 정세(定稅) 열닷말과 말세 구홉을 주고나니 결국 닷말 한 홉이 남었는데 이 가련한 사정도 불고하고 내년 소작권은 그 동리에 사는 최남조에게 이 동되었다 한다. ⁴⁾

1930년대 울산 범서면 사례이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지주-농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소작료는 70%를 상회했고, 계약된 소작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소작권을 빼앗겼다. 게다가 농민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소작료는 계약대로 납부해야 했으

4) 「小作權으로 小作人間 衝突 결국 고소」, 『中央日報』, 1932.01.13.

므로, 소작농에게 남은 소득은 가족들의 식량에 턱없이 모자랐다.

자연재해는 소작료 납부를 어렵게 하여 소작권 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일례로 1924년 울산을 포함한 경남 전역에서는 투害 때문에 도내 농민들이 소작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지불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는 소작인이 많았으며, 이 때문에 생활이 곤란해진 경남 농민들이 매일 5백여 명씩 일본으로 건너갔다.⁵⁾ 미곡 생산을 기반으로 한 식민지 농업경제는 소작농민의 몰락을 추동했다. 1927년부터 시작된 米價 폭락 역시 울산지역에 영향을 끼쳤다. 1930년에는 풍년이였음에도 미가 폭락으로 농가 몰락이 예상되자, 같은 해 11월 울산의 옥교농우회 등 8개 단체가 울산시민대회 개최를 기획하기도 했다.⁶⁾ 그렇지만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오던 농민들은 삶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든 고향에서 살길이 없어 남부여대하고 산설고 물선 타향으로 이거 해 가는 불상한 동포가 날로 늘어간다. 살기 좋기로 유명한 울산지방에도 나날이 일본으로 떠나가는 이가 늘어 작년 1년간에 남자 2,261인, 여자 631인 합 3천에 가깝운데 금년에 아직 4월이 다 가지않은 오늘에 벌써 작년의 반수가 넘는다 하니 그 곤경을 가히 짐작하겠다. 일본엔 대판 신흥 지방의 620인을 필두로 각지를 행하여 산재해 있다 한다.⁷⁾

1930년대에 들어 전국적으로 도항하는 조선인이 급증했으며, 울산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몰락한 농민이 도항을 결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도항을 대체로 제한·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했다. 도항정책은 1910년대 자유도항제에서 1919년 이후 여행증명서제도로 전환되었다가, 1922년부터 다시 자유도항제로 환원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도항이 일시 주춤했으나 1924년부터 다시 급증하자, 총독부는 도항제한조치를 단행했다. 같은 해 5월 부산에서는 시민대회가 열려 도항제한조치의 해제를 요구했고, 이

5) 「갈사록 한심할 뿐! 도일동포가 매일 5백여」, 『동아일보』, 1925.05.08.

6) 「살인적 곡가 폭락과 각지농민의 참경」, 『조선일보』, 1930.10.30.

7) 「一年間 渡航 男女 三千名」, 『동아일보』, 1933.04.21.

영향으로 일시 해제되었으나 1925년부터 또다시 강화되었다. 1928년 8월 15일에는 도항자격규정을 개정하여 도항 규제를 한층 강화했는데, 거주지에서 발급한 도항소개장을 지참해야만 도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1936년 5월에는 도항을 한층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거주지 관할서에서 발급하는 ‘도항소개장’ 휴대는 필수 조건이었다.

도항 조건은 일본 내 노동력 사정에 따라 대체로 강화되는 추세였다. 한편 거주지에서 ‘도항소개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행정 말단 기구인 구장을 거쳐 주재소에서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1930년대 말 경남 김해군 장유면 관동리의 구장이었던 김영순은 도항 희망자들을 위한 각종 신고와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호적등본을 준비하여 주재소에 제출한 뒤 수속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나, 발급 기간이 길어져 ‘독촉’하는 일이 잦았다. 그의 일기에는 ‘여의치 못하다’, ‘수속이 잘 안된다’, ‘각하를 당한다’ 등⁸⁾ 어려움을 토로하는 흔적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행정당국은 도항소개장 발급 때부터 시간을 지연시켜 도항을 최대한 억제하려 했다.

또 다른 도항 억제책은 현금의 보유였다. 도항을 결심한 농민은 “가산을 방매하여 약간의 돈을 마련”했다.⁹⁾ 고향을 떠나는 농민은 당연히 자신이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겠지만, 이러한 현금 보유의 필요성은 일제가 도항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한 자격 규정에도 포함되었다. 일제는 1928년 8월 15일부터 도항 자격 가운데 하나로 ‘탑승권과 기타 비용 등 필요여비를 제외하고도 10엔 이상의 여유금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이러한 여유자금 요건은 일본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현금 보유를 위한 ‘가산 방매’는 도항노동자가 고향에 의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하는 극단적 행위였으며, 결국 도항이라는 모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농촌을 떠난 도항노동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 일본에 정착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8) 차철욱, 「일제강점기 김해 지역 농촌의 식민지배와 농민의 일상」, 『지역과 역사』 46, (사)부경역사연구소, 2020, 232쪽.

9) 「망망한 대해 일엽주에 장검 피발한 4인의 악마」, 『조선일보』, 1933.05.16.

거주지에서 도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지만 부산항 통관과 관부연락선 승선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는 계속되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농촌에서 생활했던 농민들은 식민제국이 만들어 놓은 경제구조로부터 배제되고, 도항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식민제국의 말단 행정기관, 일본 현지에서는 자본가나 감시기구의 통제기관과 마주하면서 살아야 했다.

도항증을 발급받고 관부연락선을 탈 수 있었던 자들은 그나마 자신의 선택에 미래를 맡길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삶터로부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들은 도항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또 다른 경계넘기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도항의 통제와 밀항의 유행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녔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의 밀항은 1919년 4월 도항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여행증명서제가 시행되면서 시작되었으나, 도항 통제가 강화된 1925년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조선의 밀항조직은 부산, 마산, 여수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거제, 통영 등 주변 중소도시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밀항은 이러한 연결망 속에서 공간 간 권력구조를 만들어냈다.

부산을 근거지로 한 밀항조직은 수백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며 밀항 희망자를 모집했다. 밀항조직은 부산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브로커를 보내 밀항자를 모집했다. 도항증을 발급받지 못한 울산 농민들은 밀항조직이 구축되어 있는 부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밀항을 시도해야 했다. 당시 대도시 부산에는 농촌경제의 몰락으로 생계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급증했다. 부산은 온갖 사기와 절도, 폭력 등 범죄행위가 판을 치는 곳이었으며, 가산을 팔아 목돈을 마련해 온 농촌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공간이기도 했다. 즉 부산은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 이동을 매우 힘겨운 과정으로 만들거나 아예 가로막아 버리는 공간이기도 했다.¹⁰⁾

밀항 중심지는 부산이었으나 울산 주변의 해안에서 출발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부산의 밀항 단속이 강화될 때 주변 동해안 지역이 밀항선 출발지가 되기도 했다.¹¹⁾ 울산지역의 주요 밀항선 출발지는 방어진, 염포, 온산(달포해

10) 최민경, 「‘디아스포라 공간’ 개념의 재고찰과 부산」, 『인문사회과학연구』 19(4),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3쪽.

안), 청량면 상남리 등이었다.¹²⁾ 이 지역은 언론에서 확인되는 출발 전 검거 지역이었다. 아마 밀항선은 밀항자가 검거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출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울산 밀항의 독특한 모습도 확인되는데, 1931년 울산면 삼산리에 살던 李鍾夢(23)은 나고야, 경주 양북의 전동리와 허병조는 이 시카와현 카나자와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이용해 밀항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¹³⁾

밀항이나 일본 현지 관련 정보가 없었던 농민들은 밀항브로커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사기·폭력 등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밀항 관련 정보를 장악한 브로커들과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도항자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이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다. 밀항브로커들은 식민/제국의 권력이 양산하는 몰락 농민을 상대로 한 또다른 포식자였다. 아래 사료는 밀항브로커와 도항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하관 시외 길견(吉見) 해안에 지난 11일 오후 두 시경 밀항 조선인 박봉규 외 이십 이명이 …그들은 경남 울산군 산촌의 궁민들로써 …밀항선(이십돈 발동선)에 몸을 의탁하고 가만히 현해탄을 건너간 것인데 가다가 망망한 대해 중에서 그 배의 선장과 선부 네 사람이 달여드려 전부를 결박하여 낚고 소지금품을 모다 빼앗은 뒤에 연 사흘 동안 물 한 목음도 주지안타가 전기 하관 시외에 배를 대이고 내리라 위협하여 상륙식힌 후 그냥 어대로인지 도망하야 버린 사실이 발각되여 목하 경남 경찰부에 수배가 드러왔다 한다.¹⁴⁾

이 기사는 밀항브로커들이 도항자의 약점을 이용해 폭력과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는 다양한 수법 가운데 하나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밀항자들이 경험

11) 김승, 「일제시기 조선인의 밀항 실태와 밀항선 도착지」, 『역사와 경계』 124, 부산경남사학회, 2022, 259쪽.

12) 「방어진에서 밀항 계획 중을 수사」, 『朝鮮時報』 1929.10.05.; 「장차 출범하려는 사이 一髮의 곳에서 체포하다」, 『釜山日報』, 1935.08.13.; 「도일노동자 꺾어 밀항도중 도주」, 『동아일보』, 1930.01.11.; 「밀항부로카단 마산 등지에 발호」, 『조선일보』, 1935.03.26.; 「22명의 밀항단 출발직전에 발각」, 『조선일보』, 1937.04.22.

13) 「도항증명 못어더 비행기로 밀항계획」, 『동아일보』, 1931.05.11.

14) 「망망한 대해 일엽주에 장검피발한 4인의 악마」, 『조선일보』, 1933.05.16.

한 피해는 다양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에서 밀항수 수료를 지불하고 밀항브로커를 따라 부산까지 왔으나 브로커가 갑자기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밀항선을 보여주어 도항자를 안심시킨 뒤 밀항 수수료를 받고, 이후 경찰의 습격을 빙자해 추가로 금품을 탈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밀항자를 약속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하선시키는 사례도 있었는데, 일본 본토에 하선시키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쓰시마나 부산 인근에 하선시키는 경우도 있었다.¹⁵⁾

한편 일본 제국 권력에 의한 밀항자 감시는 식민지시기 전반에 걸쳐 계속 강화되는 추세였다. 밀항자에 대한 감시는 일본 영토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상륙 후에는 열차 안에서도 감시가 강화되었다. 1935년의 사례를 보면, 밀항 직전이나 일본 도착 후에 검거된 밀항자가 전체의 약 60%에 달했다.¹⁶⁾ 밀항이 빈번한 해상을 감시하는 관할 경찰서 직원들은 사전 정보를 토대로 밀항선이 출발하기 직전 밀항자들을 검거했다. 밀항자는 일본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더라도, 열차에서 단속을 펼치는 이른바 ‘이동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일본 경찰은 오사카, 야마구치, 효고, 나가사키 등지의 조선인 거주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가택수색도 서슴지 않았다.¹⁷⁾

이처럼 농촌경제의 몰락으로 가산을 팔아 경계를 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절차와 난관이 따랐다. 물론 다양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나름대로 정착한 울산 출신자들도 적지 않았다. 일본 본토로의 도항과 밀항이 계속 증가하자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은 만주 이주정책을 시행했다.

2) 만주 이주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가 일본 제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34

15) 「惡辣한 밀항격간」, 『조선일보』, 1939.02.16.; 김승, 「일제시기 밀항브로커의 활동과 밀항 과정에서 문제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8,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3, 180~192쪽.

16) 김승, 앞의 논문, 2022, 259쪽.

17) 이승희, 「조선인의 일본 ‘밀항’에 대한 일제 경찰의 대응 양상」, 『다문화콘텐츠연구』 13,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2, 351~353쪽.

년부터였다. 일본 제국과 조선총독부는 한일합방 이후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일합방 이후 1920년대까지의 만주 이주는 주로 항일운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 혹은 일제의 경제정책으로 토지를 상실하거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한 농민들의 농업이민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만주 이주는 일본 제국의 경제정책에 따른 것이기는 해도 조선총독부의 이주정책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관동군과 조선총독부 사이에 만주 이주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었다. 관동군은 치안 유지를 위해 일본인의 이주는 수용했지만, 조선인의 이주에 대해서는 반대했다.¹⁸⁾

관동군과 일본 제국이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조선인의 만주 이주정책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는 각기 다른 논리가 작용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건은 1934년 3월 발생한 ‘토룡산(土龍山) 사건’이었다. 당시 관동군이 일본인 이민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인 소유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현지 중국인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관동군으로 하여금 기존의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 등으로 조선인의 도항규제와 재일조선인의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1933년에도 조선인의 일본 도항이 증가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했다. 일본 제국과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협의에 따라, 1934년 10월 30일 일본 내각은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을 결정했다.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방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인을 현지에 안주시킬 방법을 강구할 것, 둘째, 조선인을 만주 및 북조선으로 이주시킬 것, 셋째, 조선인의 내지 도항을 감소시킬 것, 넷째, 일본 내 조선인에 대한 지도 및 융화를 추진할 것 등이었다.¹⁹⁾

여기에 더해 1934년 7월 조선 남부지방을 휩쓴 홍수와 흉년은 조선총독부가 만주 이주를 본격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18) 신주백, 「한인의 만주이주 양상과 동북아시아」, 『역사학보』 213, 역사학회, 2012, 241~246쪽.

19) 이승희,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정책을 둘러싼 내무성과 조선총독부의 ‘갈등’」, 『일본학』 53,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1, 208~209쪽.

조선 내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1931년부터 남만주에 5곳의 안전농촌을 건설하고, 1933년부터는 집단부락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만주 이민자의 선정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각 도에서 이루어졌다. 각 도는 각 군을 통해 이민자를 선발하고 수송 방법을 결정했으며, 이민자가 정해지면 조선총독부 외사과 직원이 경남도청에 내려와 수송 준비를 했다. 경남 출신들은 주로 경부선을 이용했는데, 울산 사람들은 울산역이나 호계역 등 가까운 역에서 출발하기도 했지만, 양산 물금역이나 대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 그때마다 출발지가 달랐다.



〈그림 1〉 만주행 울산역(『동아일보』 1934.02.08.)

조선의 만주 이주 시작에 대해 관련 연구자 대부분은 1934년 갑술년 홍수(7월~8월) 이후를 기점으로 삼고 있으나, 울산군에서는 1934년 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934년 2월 5일, 2월 24일, 3월 1일에 울산역을 통해 만주 이민단이 출발한 사실이 확인된다.²⁰⁾

울산은 남조선 지방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평화촌으로 이름이 높다. 그 평화촌에도 농촌의 경제공황이 닥쳐와서 아침 저녁 풀뿌리로 연명을 하다가 그것도 구할 길이 없어져 울산을 유곡리 동민 강무일 외 23호는

20) 「一洞 23戶에서 생활 찾아 北國行」, 『동아일보』, 1934.02.08.; 「울산역 출발 재민 2일간에 140명」, 『조선일보』, 1934.03.07.

釜鼎 衣籠 식기 등을 팔아서 여비를 작만하여 가지고 지난 5일 오후 4시 반 차로 멀리 만주 무순을 행하여 출발하였다는데 남부여대하고 떠가는 그 광경은 참아 보지 못할 광경이었다 한다.²¹⁾

울산에서는 1929년부터 루스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폴뿌리로 연명’하던 농민들은 만주 이주를 선택하고, 가재도구까지 팔아 여비를 마련했다. 앞서 살펴본 도항노동자처럼, 고향을 떠나는 농민들 역시 귀향을 기대하지 않았다. 만주 이주는 가족과 영영 이별해야 하는 슬픈 사건이었다. 만주로 떠나는 사람과 이를 배웅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던 울산역은 “이별하는 우름소리가 끈일새 업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곰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비극”²²⁾의 현장이었다.

울산 귀환동포들이 만든 대표적인 마을인 삼남읍 에덴마을을 일군 전금석씨 가족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전홍은씨는 1936년 4월 5일 호계역에서 만주행 열차에 올랐고, 나머지 가족들은 1937년 12월 양산 물금역에서 기차를 탔다.²³⁾ 전금석씨의 선친이 호계역을 출발하던 광경은 『동아일보』(1936.05.01.) 기사에 확인된다.²⁴⁾

이상에서 검토한 일제강점기 울산지역 농민들의 해외 이주는 일본 제국과 조선총독부가 만들어낸 조선 지배정책에 기인했다. 이 시기 대표적인 해외 이주인 일본 도항과 밀항, 만주이민은 식민권력과 제국권력이 만들어낸 것이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과정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권력관계가 중층적으로 작동했다. 이주민들은 이주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향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했으며, 출발과 동시에 새로운 이주지에 뿌리내리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다.

21) 「一洞 23戶에서 생활 찾아 北國行」, 『동아일보』, 1934.02.08.

22) 「울산역 출발 재민 2일간에 140명」, 『조선일보』, 1934.03.07.

23) 「최고령 귀환동포 전금석옹에 만주 봉천 이주사를 듣다」, 『울산매일』, 2016.08.12.

24) 「살 길을 찾아서 허둥지둥 눈물의 길을 떠나가는 이민 금월초에도 울산군 내에서는 농소면 일대에서 1백여 명이 호계역을 떠났거니와...」(『동아일보』, 1936.05.01.)

3. 귀환동포의 울산 정착과 ‘棄民’화

1) 재일조선인의 추방과 귀국, 그리고 이동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GHQ는 미국이 구상했던 일본 제국의 해체를 서둘렀다. 해외에 나가 있던 일본인을 일본 영토 내로 송환하고, 대신 일본 본토에서 생활하던 조선인·중국인·대만인들을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려 보내야 했다.²⁵⁾ GHQ는 이동을 강제당한 이들을 ‘송환자’로 불렀다.

GHQ는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서 일본 내 조선인들의 신속한 귀환을 추진했다. 이는 해외로부터 귀환하는 일본인들로 인해 가증될 식량 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강제 동원노동자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치안 불안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였다.²⁶⁾ 그래서 강제동원노동자·군인·군속 등을 우선적으로 송환했다. GHQ는 1946년 3월 조선으로 귀국하지 않은 조선인을 밀항자로 규정할 정도로 송환정책은 강제성을 띠었다. 그런데 GHQ는 재일조선인이 일시에 귀국할 경우 조선 경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²⁷⁾ 이처럼 재일조선인의 귀국은 신속하고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일본의 패전 과정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열악한 경제적·주거적 환경에서 생활했다. 특히 전쟁 말기 미군의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로 전쟁 공포가 커지면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조선으로의 탈출을 시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언론은 이들을 ‘전쟁재민(戰災民)’으로 불렀다. 아울러 일본인들의 인종적 반감 역시 조선인들에게는 커다란 위협과 공포로 작용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의 귀국은 일본 제국 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 GHQ의 신속한 송환정책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경험한 전쟁의 공포와 일본인들의 인종적 반감 등 다양한 강제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반면 이를 수용해야 할 조선에서는 귀환 조선인들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

25) 임종명, 「부산·경남 지역의 콜레라 발병·만연과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 직후 동아시아 국제 정치」, 『역사와 경계』 126, 부산경남사학회, 2023, 261~263쪽.

26) 鈴木久美, 『在日朝鮮人の「歸國」政策-1945~1946』, 東京: 緑蔭書房, 2017, 56쪽.

27) 조용욱, 앞의 논문, 254~257쪽.

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내 각자의 근거지에서 센자키(仙崎), 마이즈루(舞鶴), 시모노세키(下關), 하카다(博多) 등 조선과 가까운 서일본 항구로 모여들었다. 공식적인 귀국선이 운영된 것은 8월 31일 센자키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²⁸⁾ 8월 20일 고안마루(興安丸), 22일 도쿠주마루(德壽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연구도 있다.²⁹⁾ GHQ와 일본 정부의 계획상으로는 강제동원노동자와 군인·군속이 우선 귀국 대상이었고 일반인들은 후순위였지만 이들 역시 귀국을 위해 주요 항구에 집결했다. 조선인 가운데는 기약없는 공식적인 연락선을 기다리는 것보다 私船을 구입해 귀국길을 선택하기도 했다.³⁰⁾ 1945년 11월 말 10~20톤 규모의 사선은 대략 200명을 태우고 대한해협을 건넜다.³¹⁾ 하지만 사선은 위험했다. 우리가 잘 아는 浮島丸 사건 이외에도 향해 도중 사고를 당하는 배들이 많았다.

연락선을 이용해 부산항에 도착한 귀환동포는 부두에서 간단한 방역과 일본은행권 환전 후 각 지역별로 배정된 교통편을 이용해 연고지로 향했다. 교통편은 기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선박도 귀환동포 수송에 가담했다. 울산으로 가는 사람은 동해선을 이용했으나 연고지로 떠나지 못한 자들은 부산항에 정착했다.

다음은 울산의 귀환동포 현황을 잘 보여준다.

현해의 황파에 부딪기며 일엽편주 밀선으로서 고국 해방의 소식을 덧
고 思鄉의 안타가운 가슴을 안고 귀국하는 동포는 이곳 울산 병영에도
매일 평균 3천여 명에 도달하고 있다.³²⁾

1945년 12월 기준 울산 병영에 모여든 귀환동포가 매일 평균 3천여 명에 이를 정도였고, 방어진에도 귀환동포 약 2천여 명이 머물고 있었다.³³⁾ 이들

28) 「昨日부터 連絡船運航, 歸還同胞를 救護하자」, 『釜山日報』, 1945.09.01.

29) 최영호,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 『부관연락선과 부산』, 서울:논형, 2007, 126쪽.

30) 최민경, 앞의 논문, 2021, 9쪽.

31) 『G-2보고서』, 1945.11.20.

32) 「자가를 귀국동포의 보급자리로 제공」, 『민주중보』, 1945.12.05.

은 부산항을 통한 귀국자들도 있었겠지만, 밀선(사선)을 이용한 사례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일제 말 대한해협에 설치된 어뢰로 인해 부산-시모노세키 항로를 대신하여 울산-油谷 항로가 계획³⁴⁾되었던 사실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해방 직후 서일본 항구에서 출발한 귀환동포가 울산을 경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油谷은 초기 귀환동포가 조선으로 출발했던 주요 항구인 센자키 인근에 위치했다.

귀환동포가 귀국 후 각자의 연고지에서 생활한 환경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는 희박하다. 울산의 경우에도 실상을 밝힐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 부산에는 귀국하는 귀환동포를 구호하기 위한 다양한 구호단체들이 구성되고 활동했으나, 울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구호단체는 1946년 1월 11일 『민주중보』 광고에 등장하는 ‘울산귀환동포동지회(이하 동지회)’였다.

동지회는 울산의 지역민보다는 귀환동포들 스스로가 조직한 단체였다. 대표자는 辛萬石이었고, 구성원은 20여 명이였다.³⁵⁾ 동지회는 각 지역별 지부도 만들었다. 앞서 울산에 들어온 귀환동포의 수와 비교해 보면 동지회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2월 방어진에서는 ‘귀환동포동지회 방어진지부’가 결성되었다.³⁶⁾

한편 1946년 2월 10일 울산 귀환동포들은 울산태화학교 강당에서 ‘전재 귀국동포상조회(이하 상조회)’를 조직했다.³⁷⁾ 1946년 3월 31일 기존 ‘동지회’와 同相會가 발전적 해소를 한 뒤 ‘戰災歸國同胞互助會(이하 호조회)’를 결성했다.³⁸⁾ 기존 귀환동포 조직이 동지회와 상조회 두 개였는데, 동상회가 상조회와 동일 조직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호조회의 대표는 동지회의 대표였던 신만석이 맡았다. 이 단체는 1947년 8월 31일 8·15 기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 이 무렵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33) 「방어진 귀동 결성」, 『민주중보』, 1946.02.26.

34) 기무라 겐지, 「關釜連絡船이 輸送史에서 차지하는 위치」, 『한국민족문화』 2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177~178쪽.

35) 「귀환동포동지회 울산에서 새 발족」, 『민주중보』, 1946.01.18.

36) 「방어진 귀동 결성」, 『민주중보』, 1946.02.26.

37) 「戰同相助會, 울산서 강력발족」, 『민주중보』, 1946.02.18.

38) 「울산 귀동회 통일」, 『민주중보』, 1946.04.04.

울산 귀환동포단체의 활동은 주거 및 의식 지원, 실업자 구제였다. 이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는 많이 확인되지 않는데, 동지회 방어진지회가 적산가옥을 활용한 주거 문제 해결과, 식량 배급을 위한 협동조합 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호조회가 1946년 4월 울산수리조합으로부터 복구공사(135만원)를 도급하기도 했다.³⁹⁾ 이 무렵부터 구호단체의 활동은 단순 구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귀환동포의 일자리 알선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계 또한 적지않았다. 주택문제와 관련해 방어진에서는 일본인들이 남겨 놓고 간 적산가옥을 이용한다든지, 병영에서는 조선건국울산병영협회 회원들이 자기 집을 내어주는 미풍들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산가옥 활용은 귀속재산 불하 규정이 수립되지 못한 점, 관리 기관의 비협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식량문제였다. 1945년 말부터 시작된 조선 전체 식량문제는 1945년 10월 5일부터 실시된 식량통제정책 폐지와 미군정의 미곡시장자유화가 원인이었다. 정책의 전환은 미군정이 1945년 식량 생산에서 잉여가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확한 전망에 기인했지만 상인들의 매점이 전국을 식량난에 빠뜨렸다.

이러한 사정은 울산에도 마찬가지로였는데, 언론에서는 1946년 초 식량난과 쌀 배급 관련 기사들이 빈번하게 게재되었다. 식량난은 전국적이고 울산 전체의 문제이기는 했으나 귀환동포를 위한 구호체계가 미흡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이 경험한 피해의 무게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1946년 1월 23일 밤 발생한 울산읍 학성동 蔚山米倉 화재사건은 식량난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발생한 상징적 사건이었다.⁴⁰⁾

그런데 귀환동포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일본에서 가져온 일본은행권(日銀券)과 개인 반입재산의 통제였다. GHQ는 1945년 10월 15일 지령으로 조선인이 지참할 수 있는 현금을 1,000円으로 제한하고, 수하물은 '한 번에 지고 갈 수 있는 분량'에서 조금씩 늘렸다. 귀환동포는 귀국 때 부산

39) 「울산서 귀동구제 수리공사 기공식」, 『민주중보』, 1946.04.28.

40) 「灰燼된 100만원 蔚山米倉 一部 燒失」, 『민주중보』, 1946.01.29.

항 제1부두에서 자신이 소지한 일본은행권을 조선은행권으로 교환하고, 나머지는 예치해야 했다. 1,000엔은 1~2개월의 생활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조치는 일본이 신권을 발행하면서 구권을 회수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일본에서 가져온 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된 귀환동포는 싼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재산반입은 일본에서 출국할 때 위탁했다가 따로 들여왔는데, 위탁한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귀환동포의 생활난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6년 들어 재일조선인들이 귀국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요인은 귀환동포들이 밀수와 밀항 등 비정상적인 절차를 어쩔수 없이 선택하도록 추동했다.

밀항과 밀수는 GHQ의 추방과 전쟁 공포로부터 안전지대를 찾아온 귀환동포들이 마주한 생존 위협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모험적인 방법이었다. 밀수는 밀수품이 소비되는 시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울산에서의 밀수는 울산 사람이 밀수와 연계된 사례도 있고, 울산 해안 즉 방어진 등이 밀수를 목적으로 한 밀항의 출발지로 활용되거나, 장생포가 밀수품 보관 장소로 이용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일본 토치기현에 사는 심재구가 조선 울산군 심병호에게 2월 8일 보낸 편지...나는 오늘 최근 여행에서 시모노세키로부터 돌아왔다. 나는 도쿄에서 자동차 한 대를 살 계획이며 그것을 오사카로 부칠 것이다. 나는 오사카에서 비밀 배를 통해 여기서 산 물건들과 함께 2월 말쯤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알기로 아까모토가 여기서 물건을 구입해 며칠 전 비밀 배를 통해 한국으로 떠났다.⁴¹⁾

나는(부산 서대신정 ‘아저씨’-필자 주) 울산 방어진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 편지를 쓴다. 나는 약 20일 후에 돌아올 예정으로 일본엔 210,000엔을 가지고 간다. 함께 가는 세 친구도 일본엔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지한 액수는 710,000엔이다. 비록 위험한 여행이긴 하지만 난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성공하면 3~4백만 엔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⁴²⁾

41) 『G-2보고서』, 1946.02.22.

42) 『G-2보고서』, 1946.03.01.

위 검열에서 적발된 편지는 조선에서 엔화를 수집하여 일본으로 밀항한 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울산으로 귀국한 귀환동포들과 이들이 소지한 일본은행권 일부가 밀수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견고해지기 시작한 조선과 일본의 국경을 넘는 모험을 감행한 자들, 특히 귀환동포가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실상은 밀항에서 쉽게 확인된다. GHQ는 1946년 상반기 동안 조선으로 귀국했던 송환자들의 일본 밀항이 많아졌다고 공식 발표했다.⁴³⁾ 이 시기 밀항자는 단순 투기꾼이라기보다 일본에서 생활경험이 있으면서, 귀국 전 일본에 남겨둔 재산을 밀수입하거나 그것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목적으로 밀항을 시도했다.⁴⁴⁾

울산지방의 귀환동포 중에는 물가폭등으로 생활고에 못견디어 포고령의 금단선을 넘어 방어진항에서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가려는 유랑군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경찰 당국은 밀항을 감시하고 있느냐 일반은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줄 행정당국의 근본대책을 요망하고 있다.⁴⁵⁾

(비운의 一戰災民 울산 수박골 朴永世씨) 17년전 일본 산구현 우부시에 드러갔다가 해방되자 곳 고향이라고 도라와보니 이러케도 허무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시다. 지난 겨울부터 이날까지 다섯 권속을 다리고 기적적으로 살아온 역사야 거러온 자적에 피눈물이 매쳐 잇슬것입니다. 이래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엄은 일반이니 차라리 고향 땅에서는 서툼일바에야 오히려 17년 전이나 생업에 낫익은 타국일지라도 일본 땅이 그립습시다.⁴⁶⁾

위 두 사료는 귀환동포가 귀국 후 생활고로 밀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생업에 낫익은’ 곳에서 재기를 노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귀환동포의 밀항은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밀항브로커의 발빠른 움직임도 한몫했다. 이 시대 밀항도 남성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43) 「朝鮮人 密航에 曠司令部 發表」, 『부산신문』, 1947.07.13.

44) 차철욱, 앞의 논문, 196~197쪽.

45) 「도일군이 운집? 해방 조선의 기현상」, 『민주중보』, 1946.08.04.

46) 「결식하는 유랑귀동」, 『민주중보』, 1946.05.19.

귀환동포의 밀항 장소는 방어진, 대현면, 정자 등 울산 외곽 바닷가 마을들이었다. 울산에도 밀항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밀항단이 있었다. 장생포 선주 양금석, 선원 이원수, 방어진 港務署員 김진영 등은 1946년 3월 말경에 일본 시모노세키에 밀항해 돌아오는 길에 철물 등 10여 종 시가 약 4만 원어치의 물품을 밀수입했다. 이들은 5월 중에 귀환동포 30명을 밀항시켰고, 6월 11일에 다시 30명을 밀항시키려다가 발각되었다.⁴⁷⁾

울산에 돌아온 귀환동포 중에는 밀항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생활 공간을 찾아 유랑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오늘도 남자들이 막일을 하러 나간뒤였다. 申雄의 마누라 돌이가 설거지를 하거나 여덟살 먹은 福이가 달려들어 “엄마 엄마 우리 이러지 말고 일본에 가자 그러면 나 요-지앤(유치원-필자 주)도 가고 학교도 갈 것인데 응”하고 졸랐다. 돌이는 생각했다. 이것이 저 건너편 동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보고 왔구나 가슴이 찌저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일본 히로시마에 잇을 때는 큰놈 德이란 놈은 2학년애 다녔고 이것도 유치원에 갔던 것인데 작년 동짓달애 조선을 나와 남편 고향인 창령에 갔으나 할 일이 없었다. 울산 친정을 차젓으나 다 저곰 살기 바빠 땅 한 마지기 어더 부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이곳을 와서 석달을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지난 5월애야 이곳(부산 범일동 매축지-필자)에 드러 죽지 못한 목숨을 이끄러 잇는 것이다. 그동안...덕이는 일본에 도라가자고 했으나 그때마다 그것은 못할 소리다라고 했던 것이다.⁴⁸⁾

일제강점기 부산 범일동 매축지에 건설된 보국대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동포 돌이 가족의 이야기다. 귀국 후 남편 고향 창녕과 자신의 친정 울산에 갔다가 아무 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어 다시 부산으로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귀국 후 연고지로 떠난 귀환동포들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처지였다.

47) 「밀항 밀수범 구형」, 『부산신문』, 1946.09.05.

48) 「항구부산에 이해도 저무려」, 『민주중보』, 1946.12.22.

2) ‘棄民’이 된 울산 이주 귀환동포

미군정기 행정 당국의 귀환동포 정착 계획은 1946년 봄이 되어서야 수립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일시적인 구호 위주의 대응이었다. 미군정은 1946년 3월 서울 귀환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조선전재농민협회구제단’을 조직하고, 신한공사로 하여금 귀환동포 중 농업 유경험자를 농업노동에 종사케 한다는 방침⁴⁹⁾을 세웠다. 미군정은 농촌 이주를 귀환동포 정착의 한 방안으로 인식했다.

한편 경상남도도는 1946년 봄 귀환동포의 일자리를 농업, 광산 및 공장, 그 외 사방공사와 수리공사 등 구제사업으로 나누어 알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⁵⁰⁾ 하지만 이들 계획은 1년 가까이 지난 1947년 봄이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이 중 귀농정책은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이는 아마 귀환동포들의 풍부한 농업 경험과 실현 가능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상남도도는 1947년 3월 농업 이주 대상지를 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해방 후 ... 해외에 있던 전재동포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요즘 도내에는 실업자가 격증하여 그 수는 약 5만 내지 10만에 달하여 잇는 현상에 비추어 경남도에서는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불모지를 개간하게 되었다. 즉 지난 15일 신한공사 부산지점과 도부군 관계관이 상의하여 울산 비행장 1백 71정, 동 삼남면 불모지 3백정, 사천비행장 165정, 창녕군용지 470정, 밀양비행장 20정, 계 1천 127정을 개간하여 2천 254호를 설치하는 동시에 실업자를 이주시키어 이주민에 대하여는 호적당 최고 5단보의 경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식량과 농구는 가급적 배급하기로 결정하였다.⁵¹⁾

위 기사는 귀국 후 부산에 머물고 있는 귀환동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었

49) 「전재 귀환동포를 농업전사로 항구적으로 생활보장」, 『동아일보』, 1946.03.21. 이 사업으로 서울에서는 영등포비행장 부근에 농민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동아일보』, 1946.06.04.).

50) 「七億圓의豫算 必要 道內 30萬 失業者 對策」, 『民主衆報』, 1946.04.05.; 「歸還同胞 失業對策」, 『釜山新聞』, 1946.05.19.

51) 「실업자에 경지제공, 울산 등지에 2천 여호 이주」, 『민주중보』, 1947.03.22.

다. 행정당국의 시선에서 귀환동포는 결인, 餓死, 강도, 방화, 절도, 전염병 등 행정과 위생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을 정비할 대책이 필요했다.⁵²⁾ 한편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귀환동포가 일본과 만주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다는 인식하에, 이들이 당면한 고통을 당연시하거나 이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⁵³⁾ 부산부는 귀환동포들이 도심 곳곳의 수용소나 노상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문제 해결 또한 시급했다. 1947년 초 부산 인근의 울산·김해 대저·양산·밀양 등지에서 농업이민이 동시에 시작된 것도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었다.

귀환동포와 관련한 주택문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황무지나 국유지 개간이었다. 귀속재산을 귀환동포들의 주거공간과 일자리로 제공하려 했던 계획은 점차 어려워졌다.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공장은 원료난과 자본난으로 가동이 멈췄고, 일본인 농지는 식량공출과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과의 이권 다툼 등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 무엇보다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점이 커다란 난관이었다.

반면 황무지나 비행장, 군용지는 국공유지였고 개간을 필요로 하는 토지에서 당장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아 귀환동포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1946년 초 미군정은 식량증산을 위해 농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비행장을 신한공사로 넘겨 농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때 농토 전환이 계획된 비행장은 울산·충주·평택·수원·인천 비행장이었다.⁵⁴⁾

울산 삼남면 농업이민은 부산부 후생과가 이주계획을 세우고 1947년 3월 26일 담당 직원들의 현지 시찰로 시작되었다. 현지 시찰을 마친 부산부 직원들은 이주 예정지인 울산군 삼남면 불모지를 ‘신천지’라고 홍보했다. “이주지

52) “(부산)부는 부두세관창고에 친입하여 절도행위 등 불미한 사태를 야기하며 전염병 만연의 우려가 심한 설을 앞두고 위생 상 방지하지 못할 사태이며 앞으로 전개될 무역사무 등으로 조선의 문호인 부두창고의 중요에 비추어 부후생과에서는 과반 국민 동포들을 이진 식히는 한편 적당한 대책과 건물을 물색 중이던바 세관창고 내의 국민동포를 일소할 성안을 얻어 이전에 착수하였다”(『부산신문』, 1947.07.03.).

53) 「재민의 신천지! 봄과 함께!」, 『민주중보』, 1947.03.29.

54) 「삼팔이남 비행장 16개소 농토로 환원」, 『대구시보』, 1946.05.19.

는 언양 시장부터 십리 거리에 있으며 부산 경주간 버스 도로 근처고 약 3백정의 넓은 평야이며 부근에는 학교 면사무소 등도 있으며 교통도 편리하다 한다. 문제이던 토질은 점토이며 대부분은 일인이 구획을 지어 개발한 것이며 고구마, 감자, 낙화생 및 과수원지로서는 최적지...경작에 필요한 농구 및 주택건설까지의 천막, 의류 일체와 작물 수확기까지 식료 등을 무상배급⁵⁵⁾한다고 선전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부산부 직원이 선전한 내용 가운데 진실은 교통편과 행정기관이 있다는 것 뿐이었고, 나머지 넓은 평야, 점토 토질, 일인 개발지, 작물 생산의 최적지라는 언급과 이주 후 물자지원 약속 등은 대체로 거짓말이었다.

부산부 후생과는 울산군 삼산면에 200호를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1차 개척부대 출발을 1947년 4월 10일로 정하고 부산부 귀환동포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5인 이상의 가족이면서 영농 유경험 세대자의 이주 신청을 받았다.⁵⁶⁾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잘 몰랐던 귀환동포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4월 15일(17호, 80여 명), 4월 18일(94호, 998명)에 각각 이주했다.⁵⁷⁾ 그런데 부산부는 1진 50호를 4월 10일에 출발시킬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4월 15일로 연기했고, 규모도 17호에 그쳤다. 그 이유는 부산부 당국의 제안과 귀환동포들의 요구 차이가 컸기 때문이었다. 1진 출발 전날인 4월 14일 부산의 각 수용소 대표 20여 명은 모임을 갖고 이주 후 1개월의 무상 배급을 수용하지 않고 1개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식량을 배급하고, 배급양 또한 기존 계획량 2홉보다 많은 4홉 이상을 요구했다.⁵⁸⁾ 귀환동포들은 부산부의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주를 주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부산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자,⁵⁹⁾ 귀환동포는 4월 15일 1진 출발 후 4

55) 「재민의 신천지! 본과 함께!」, 『민주중보』, 1947.03.29.

56) 「울산개척대 進發」, 『민주중보』, 1947.04.05.

57) 울산군 삼남면 농업이민자들의 회차별 수는 정확한 자료로 확인 곤란하다. 당시 언론사 발표 자료가 모순 점을 가지고 있는 등 한계가 있다. 「이주 착착 진행, 농지 얻어 빈둥 감격」, 『부산신문』, 1947.04.13.; 「신천지에 새 살림! 삼남 이주 제일반 출발」, 『민주중보』, 1947.04.16.; 「棄民이 된 울산 삼남 이주민 90만 평에 천막 3개」, 『민주중보』, 1947.04.23.

58) 「貧同의 울산이주 성과여하 극히 주목시」, 『부산신문』, 1947.04.16.

59) 「울산 이주의 극빈자에 수확기까지 식량배급」, 『부산신문』, 1947.04.17.

월 18일부터 3일간에 걸쳐 이주를 완료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부산부의 홍보와 비교해 차이가 컸다. 4월 19일과 20일에 기획 기사를 실은 『부산신문』(1949.04.19., 1949.04.20.)은 삼남면 직원의 말을 인용해 ‘희망에 불타’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 반면, 4월 18일 이주민과 동반 취재한 『민주중보』(1947.04.23.)의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의 귀환동포 가운데 94호 916(998)명은 4월 18일 아침 8시 반 열차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울산역에서 삼남면 이주지까지 25km 60리 길을 이동할 교통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더구나 이들을 안내할 울산군의 담당 공무원도 없었다. 그래서 부산부 인솔 담당자가 트럭을 구해 와서 절반만 먼저 이동시켰다. 하지만 현장은 더 황당했다. 주거용 텐트는 3~4매에 지나지 않았고, 텐트는 가시밭에 설치되었으며 바닥에는 가마니 한 장 깔려 있지 않았다. 주민들은 즉시 부산으로 귀환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부 직원은 귀환동포들을 다시 울산 시내 울산비행장 격납고에 임시 수용했다. 앞서 같이 부산을 출발한 귀환동포 중 울산역에 머물러 있던 절반은 역에서 하루를 보냈다.⁶⁰⁾

이후 귀환동포 (163세대 996명)는 울산군과 삼남면의 지원으로 천막 70여 개를 설치하고 이주해 일부는 토지를 개간하고, 고구마와 감자를 파종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울산비행장 격납고에서 생활하던 이주민 37세대도 이주계획을 세웠다.⁶¹⁾ 1947년 6월 무렵 울산군 삼남면 이주계획은 대체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부는 울산군 삼남면에 200세대 이주를 완료하고 1947년 6월 7일 이주식을 거행했다.⁶²⁾

하지만 울산군 삼남면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문제는 기존 삼남면민과 이주민의 분쟁이었다. 울산군이 이주민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한 토지 중에 비옥한 토지는 면민들이 차지했다. 기존 조선인 지주와 적산 농지는 연고자인 지역민들이 차지하거나 면장 친척이 장악했다. 면장

60) 「棄民이된 울산 삼남 이주민 90만 평에 천막 3개」, 『민주중보』, 1947.04.23.

61) 「동족애에 歸同 소생」, 『민주중보』, 1947.05.13.

62) 「삼남면 이주민 2백여 세대 완료」, 『부산신문』, 1947.06.10.

은 개간 가능한 농지보다는 황무지(목장)를 귀환동포에게 분배했고, 귀환동포는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토지를 개간해야 했다. 부산부 후생과에서 보내온 고구마 싹 12만 본을 황무지에 심었으나 토지가 황폐하여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200세대가 생활하는 곳이었지만 의료기관이 없었고, 주민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천막생활에 방치되었다.⁶³⁾

경상남도과 부산부가 대도시 부산에 집중된 귀환동포를 분산하기 위해 실시한 농업이민 정책은 부산 인근의 김해·양산·울산·밀양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귀환동포는 순조롭게 정착했으나, 울산 삼남면 이주민들은 정착 이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을 떠났다. 당국으로부터 토지분배와 정착 지원을 약속받았던 귀환동포는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지역민들의 차별로 인해 성공적인 정착에는 실패했다.

4. 귀환동포 없는 ‘귀환동포’ 마을

1) 귀환동포 마을의 형성

울산에 귀환동포의 농업이민이 확인되는 공간은 앞 장에서 언급한 삼남면을 비롯해 울산비행장, 대현면 울산 염전 등지이다.

울산비행장의 농경지화는 1946년 5월에 이미 계획되었는데, 부산 거주 귀환동포 약 300세대가 1947년 봄 경상남도 농업이민에 맞춰 이주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⁴⁾ 울산비행장 개간면적은 171町이었고,⁶⁵⁾ 수리조합에서 전담으로 개간 중이었다. 하지만 1949년 5월 군부가 비행장으로 복구를 추진하면서 농지 개간은 무산되었다.⁶⁶⁾ 이처럼 농경지에서 비행장으로 용도가 다시 변경되자 이주민들의 생계와 주거공간이 문제가 되었다. 다행히 울산의 거부 이종하씨가 울산읍 신정리에 주택용 부지를 기증하고, 울산읍이 주택 120호 건설비를

63) 「歸農 移住同胞를 차저서, 計劃은 大體 成功(下)」, 『부산신문』, 1947.08.30.; 「가업슨 귀동 이주지를 차저서」, 『민주중보』, 1947.08.30.

64) 「전재민과 실업자 수천명 이주 개간」, 『조선일보』, 1947.06.11.

65) 「실업자에 경지제공, 울산 등지에 2천여 호 이주」, 『민주중보』, 1947.03.27.

66) 「울산비행장 복구공사 완료」, 『민주중보』, 1949.05.31.

제공했다.⁶⁷⁾ 하지만 귀환동포 300호 중 40%만이 신설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는 주택이 없었고 생계수단이었던 농지마저 없어져 열악한 경제 상황에 방치되었다.

한편 1946년 4월 초 귀환동포 16호는 울산군 대현면 상개리에서 염전 개간에 참여했다. 이들은 1947년 경상남도의 농업이민 정책 이전에 정착한 귀환동포들로 보인다. 16호의 귀환동포들은 차영찬 외 거주민 7호를 합쳐 92명이 거주지 부근을 매립해 1차로 2천 9백여 평을 준공하고, 다시 1947년 2월에 2차로 준공해 1만 수천 평의 염전을 확보했다. 그런데 하남면에서 염전 1만여 평을 경영하던 김도관이 위 귀환동포 등 마을 사람들이 개간한 염전이 토목국의 정식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해 권리를 빼앗으려 했다.⁶⁸⁾ 중앙청 토목국은 염전 총면적 2만 5천 818평 중 김도관에게 1만 6천326평, 지역민들에게 9천 492평을 분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⁶⁹⁾

이처럼 울산으로 이동한 귀환동포들은 국가의 알선이나 지역민들 상호간의 협력으로 삶을 개간했으나, 국가 혹은 지역 내 권력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는 경험을 했다.

다음은 1947년 4월 이주했으나 행정당국의 지원이 빈약해 정착이 어려워 논란이 많았던 삼남면으로 이주한 귀환동포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三南面誌』(2002년)는 귀환동포가 생활한 신안마을, 강당(에텐)마을, 금사마을, 방기마을, 연봉마을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⁷⁰⁾ 각 마을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오늘날 경남 양산시 통도사와 울산광역시 삼남읍 사이 공단지대이다.

이들 마을에 귀환동포가 이주해 정착한 공공기록이나 개인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신안마을, 금사마을, 에텐마을에 대한 현지 조사와 관계자 면담

67) 「3백세대 귀동에 안식처, 울산 이중하씨 대지 2천평 기증」, 『민주중보』, 1949.10.20.

68) 「울산군 대현면 염전개간에 분규」, 『부산신문』, 1947.07.05.

69) 「울산 염전사건 드디어 낙착」, 『민주중보』, 1948.02.21.

70) 三南面誌編纂委員會, 『三南面誌』, 2002, 8쪽. 강당마을은 엄밀하게 따지면 에텐마을이다. 강당리 내에 강당마을, 에텐마을, 지푸네마을 등 자연마을이 흩어져 있다.



및 구술을 진행했으나, 연봉마을과 방기마을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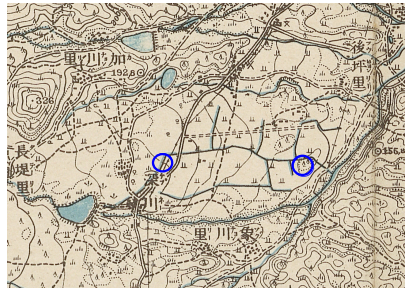
1947년 4월 이주 때 귀환동포들이 거주했던 곳은 신안마을이며, 이후 신안마을에 정착하지 못한 귀환동포들

이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여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 대한 조사는 1945년 귀국 후 연고지로 향하지 못하고 부산에서 머물던 귀환동포들이 행정당국의 알선으로 이주한 정착지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1918년과 1939년 지도는 1947년 신안마을과 1959년 에덴마을의 자연적인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918년 지도에서 에덴마을은 황무지였고, 신안마을은 침엽수(소나무) 지대이면서 주변은 황무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9년 지도에서 에덴마을은 황무지가 그대로 였고, 신안마을 주변은 대부분 논으로 바뀌었으나 신안마을만은 침엽수(소나무) 지대로 남아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3〉 1918년 에덴마을(좌), 신안마을(우) 「彦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 1939년 에덴마을(좌), 신안마을(우) 「彦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상에서처럼 해방 후 울산으로 이주해 온 귀환동포들은 대현면 바닷가, 울산비행장, 삼남면 황무지 일대에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의 무성의, 지역민의 배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정착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귀환동포의 흔적이 남아있는 연양의 신안마을과 에텐마을의 사례에서 울산 지역 귀환동포의 정착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신안마을

삼남읍 상천리 신안마을회관 입구에는 1981년 세워진 〈마을연혁〉 비석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신안마을은 돌과 잡초뿐 황무지를 1946년 6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귀환동포 150세대가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황무지 개간에 갖가지 난관이 닥치자 각처로 이산되고, 10여 호수만 남게 되었으나 1960년 군내 영세민 37세대가 이주하여 황무지 개간을 완료하였으며 1963년 10월 1일 내무부 승인 신안마을로 분동되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1976년 취락구조개선사업 갖가지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수상하여 외국인 홍보마을로 선정되어 새마을운동의 산교육장이 되어 오늘의 부자마을을 만든 온 부락민들의 일치단결된 의지를 기념키 위하여 이 비를 세웁니다.

1981년 8월 15일

한 문장으로 된 이 연혁에는 귀환동포, 황무지 개간, 신안마을, 새마을운동, 일치단결 등이 강조되어 있다. 150세대의 귀환동포가 이주해 황무지를 개간하다가 대부분 떠나고 10여 세대만 남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귀환동포의 이주를 마을 역사의 출발로 삼고 있다.

현재 신안마을에는 귀환동포 1세대는 전부 세상을 떠났고 1.5세대인 우상용 우덕용 형제만이 이주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귀환동포 이주 후 마을의 이야기는 우상용씨의 구술에 따른다.⁷¹⁾ 우상용씨는 1942년생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생활했다. 아버지는 원래 신안마을 이웃인 상천이 고향이었고, 어머니는 하천 출신이었다. 부모님은 결혼해 히로시마로 도향했고, 아버지는 광산노동자로, 어머니는 탄광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원자탄 투하 당시 히로

71) 우상용 구술(1943년생, 2024.02.03., 우상용 자택)

시마에서 생활했으나, 평소 어머니가 피난 연습을 시킨 덕분에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형제는 일본에서 3형제, 귀국 후 동생 2명이 더 태어나 모두 5형제였다.

1947년 6월 이주식을 거행한 귀환동포들이 첫 대면한 신안마을은 돌이 가득한 황무지였다. 지금도 마을에서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상용의 구술에 의하면 “이 주변에 드문드문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고, 물 나는 곳이라고는 요 한군데…이제 물이 없고 땅이 아주 토박하고 돌이 많(았다-필자). 이곳에 돌로 이루어진 곳이라 … 개간해 봤자 곡식도 잘 안 좋아 …씨를 한 움큼 뿌려놓으면 한 움큼 씨 찾기가 어려울 그런 토지”였다. 신안마을 땅은 씨를 뿌려도 수확이 힘들 정도로 척박했다.

그리고 위 강당마을과 신안마을에는 일본인이 경영한 배밭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당마을에는 ‘고고’, 신안마을에는 ‘서천’이 각각 배밭을 운영했다고 기억한다. 지금도 신안마을 북동쪽에는 일본식 건물이 남아있다.

황무지였던 신안마을의 들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우상용의 부친은 이웃한 마산리 김부자 집에 머슴살이로 갔고, 어머니는 언양장과 통도장을 상대로 떡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었다.

우상용은 신안마을에 이주한 귀환동포가 땅은 자기 힘닿는 만큼 개간해서 사유화할 수 있었으나 곡식을 생산할 수 없어 천막촌이 “폭삭 주저 앉았다”고 기억한다. 모두 밥 먹을 곳을 찾아 마을을 떠났다. 현재 마을에 천막촌 시절부터 2세가 살고있는 집은 3~4집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의미있는 기사가 있다.

군내 삼남면 신흥부락 500명(백 세대) 주민은 8.15 해방 후 귀환동포로서 부산 시내에서 유리걸식하고 있는 것을 당국에서는 이들 귀환동포를 구제하기 위해 황무지 별판에다 천막을 치고 이주케 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구호하고 오던 바 6.25 사변 후는 구호가 완전 두절되자 자력갱생책으로 그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있으나 토박한 개간지에서 수확이 없어 완전 실망 상태에 빠져 또다시 유리걸식하지 않으면 안 될 비운에 휩쓸려 있는 실정에 있어 관계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망되고 있다.⁷²⁾

위 기사에 등장하는 ‘신흥부락’ 명칭은 오류가 아닌가 싶다. 신흥부락은 1960년 당시 연양면 직동리에 있던 마을 이름으로 확인되지만, 삼남면에는 신흥부락이 없었다. 내용으로 봐서는 신안부락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위 기사가 신안부락의 이야기라면 1953년 초에 150세대였던 귀환동포는 100세대 밖에 남지 않았다. 아마 1951년 흥년으로 1952년 봄부터 유랑민이 많이 발생할 때 이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마을은 이 주 당시 기대했던 조건과 많이 달랐고, 전쟁 중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던 구호물자 도입과 공장 가동 등 경제상황은 유랑민을 흡수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신안마을은 국도 35호선에 접해 있고 부산과 교통이 원활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부산에 대한 정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요소들이 귀환동포의 이동을 좀 더 자유롭게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60년 귀환동포가 빠져나간 자리에 울산군 내 영세민 37세대가 들어왔다. 조사 중 신안마을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 중에는 유독 상북 사람들이 많다. 뒤에 서술할 에덴마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상북보다는 황무지이기는 하지만 넓은 땅을 가질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이 지역으로 이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신안마을 토지는 일본 나고야시에 본사를 둔 豊田産業株式會社가 1942년 매입했다. 마을 사람들은 1960년부터 임대해 사용하다가, 1970년 불하받았다.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임대받는 시기는 이 마을에 영세민 37세대가 입주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개간에 착수했고, 1969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무렵 마무리했다. 마을 주민들은 황무지 개간을 종료한 뒤 1970년부터 마을 땅을 불하받았다.

1970년대 신안마을은 새마을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 확인되는 축사와 ‘블릭스레트’ 주택이 1970년대 초 건축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고, 스스로 ‘부자마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72) 「삼남면 이재민 살아갈길 아득」, 『부산일보』, 1953.04.09.

3) 에텐마을

삼남읍 가천리 에텐마을 경로당 앞에는 2014년 3월 건립된 <에텐마을의 연혁> 비석이 서있다.

우리 에텐마을의 연혁은 이러하다. 1945년 해방 이후 귀환동포 150여 세대가 정착하기 위하여 현재의 신안마을에 모였으나 황무지개척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각자 흩어지고 그중 일부 세대와 인근에서 합류한 세대가 사자별(현재의 삼성 SDI 위치)로 모였다. 사자별은 경상남도 종축장 부지로 지주의 주권행사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흩어지게 되었는데 1959년 2월 당시 마을지도자 김명수씨의 노력과 행정의 주선으로 송림이 우거지고 군데군데 묘지가 있는 현재의 마을 부지를 소개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벌목을 하고 집짓기를 시작하여 23 세대가 정착하게 되어 남민부락이라 이름짓고 1965년 지푸내에 있던 중남교회를 본 마을로 이축하고 부임해온 최경환 목사에 의해 축산으로 경제를 자립하고 희망과 평화의 기원으로 에텐(지상낙원)농원이라 부르던 것이 오늘날의 에텐마을이 되었다. 2014년 본 마을 경로당 신축 준공을 기념하면서 마을연혁을 정리하였다.

2014년 3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에텐마을 주민일동

위 비석 내용의 중요 키워드는 귀환동포, 신안마을, 사자별, 종축장, 남민부락, 중남교회, 에텐마을 등이다. 신안마을에 모였던 귀환동포들이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경위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마을 1세대인 전금석씨가 비석 건립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내용의 대강은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의 기사가 사자별 귀환동포 이주와 생활을 알려주고 있어 위 비석의 내용을 보완해 준다.

황무지 개척과 아울러 실업구제책으로써 경남도 보후국에서는 극빈 동포 1천여 호를 김해 울산 양산 등에 입주시켰으며 단바 금번 귀동 13호(가족 약 60명)를 울산군 삼남면 도 직영 緇羊場에 입주시켰으나 동 면양

장은 면적 50정보, 면양 90두, 뿔 백 50두, 돈 5두를 사양하고 잇섯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도 농무국에서는 의료 원료가 결핍하여 잇는 현상에 비추어 도내에서 유일한 동 緬羊場을 경작지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하여 타처를 사용하여 달라고 保厚局에 건의하는 동시에 전기 입주민이 동 면 양장을 개척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곤경에 빠진 것은 이주한 사람들이라 그 입주민 대표는 지난 19일 도 후생과를 방문하여 선처를 요망한바 잇섯는데 ...73)

에텐마을 건설과 관련해 이 기사 이외에는 더 이상 추가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면양장'은 마을 주민들이 언급하는 종축장이 확실해 보인다. 경상남도 종축장은 오늘날 삼성SDI 부지에 위치했다. 경상남도는 귀환동포들을 종축장 내에 이주시켜 개간할 계획이었으나 종축장 측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귀환동포들은 종축장 외곽인 사자별에 정착했는데, 이 마을이 금사마을이다. 물론 이주 당시에는 마을이 없었고, 귀환동포들은 사자별이라 불렀다. 금사마을 이름이 붙여진 것은 뒷날의 일이다. 주변 사람들은 사자별에 살던 귀환동포들을 '빠꿈동포'라 불렀다. 움막에서 생활했던 귀환동포의 생활방식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 마을에는 신안마을에서 이주해온 귀환동포뿐만 아니라 위 비석에서 표현한 것처럼 삼남면 인근에서 생활하던 귀환동포들도 합류했다. 합류한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전금석이다.

전금석은 1925년생으로, 1936년 만주에 가서 생활기반을 마련한 선친의 부름을 받아 1937년 이주했다. 만주에서 대구 출신 이주민이었던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해방 후에는 삼동면 보은리 양지마을로 돌아와 생활하다가 1958년 무렵 사자별(빠꿈동포마을-필자 주)로 이주했다. 사자별의 생활에 대해 “솔이고, 이불보따리, 옷 보따리 지고, 아이 두 명 업고, 골고(굴고-필자 주), 거시나무 베고, 무덤 정리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표현도 못해”라고 뒷날 전금석은 회고했다.⁷⁴⁾

사자별 귀환동포들이 에텐마을로 이주해 생활하는 과정을 전금석의 아들

73) 「전재민만 죽을 지경, 울산 緬羊場 문제로 시비」, 『민주중보』, 1947.06.22.

74) 「최고령 귀환동포 전금석옹에 만주 봉천 이주사를 듣다」, 『울산매일』, 2016.08.12.

전강민과 주동석의 구술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⁵⁾ 주동석은 1963년 에텐마을로 이주했으나 이주 이전부터 친척이 사자벌에서 살고있어 자주 놀러 다닌 때문에 초기 마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

사자벌에 모인 귀환동포는 1947년 첫 이주 이후 1950년대 말까지 인근 지역에서 이주한 자들을 포함했다. 하지만 종축장 소유주였던 경남도가 이들에게 경작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생활했던 사자벌은 황무지여서 생활은 곤란했다. 무엇보다 신불산 자락이 가까웠고, 교통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했다.

1959년 마을 사람들은 김명수라는 마을지도자와 행정 당국의 지원으로 23세대가 에텐마을로 이주했다. 당시 이 공간은 소나무와 돌밭이었고, 일제강점기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밤밭이 많았다. 마을 중간에는 무덤 특히 애기장이 많았다고 한다. 개간 과정에서 걷어낸 돌이 마을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 많던 돌은 1960년대 말 마을 앞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사용되었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에텐마을 토지는 원래 임야로 언양 교동 사는 일본인 牛來乙女(우라이에쓰메)의 소유지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1959년부터 임대해 사용하다가, 1973년 불하받았다. 토지의 일부는 1971년 산림청 소유로 되었다가 1980년대 불하된 것도 있다.

행정당국은 이주민들에게 주택용 뼈대를 세울 수 있는 목재만 제공했다. 마을 사람들은 집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들을 신불산에서 직접 구해야 했다. 마을 주택의 구조와 규모는 동일했다. 방 2칸, 부엌 1칸, 약간의 마루가 있는 구조였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한 세대만 방 1칸, 부엌 1칸의 구조인데, 전강민씨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 집은 유일하게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 마을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목조스레트’가 다수 확인되는데 허가년도 대부분은 1950~60년대로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1930년대로 기록한 가구도 있다. 이 목조스레트는 이주 당시 건축된 건물로 보인다. 아마 1970년대 토지 불하와 함께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비하면서 건축 시기를 추정해 등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75) 전강민 구술(1957년생, 2025.10.03. 전강민 자택, 전금석 아들), 주동석 구술(1938년생, 2025.08.26., 2025.10.02. 에텐마을경로당)

마을은 황무지여서 개간 후에 밭으로는 사용할 수 있었으나, 논농사는 불가능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관에서 제공하는 구호물자에 의존했고, 외부에서 생계수단을 구했다. 앞서 언급한 전금석은 목수 일을 했는데, 마을 건설 당시 주택 건축을 책임졌다. 물론 생업을 위해 장비를 챙겨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기도 했다. 주동석의 친구 가운데 이 마을에 살던 박기봉이라는 귀환동포가 있었다. 박기봉은 상북까지 노동일을 하러 왔고, 그때 주동석과 알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20여 세대의 마을 주민 가운데 이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살고있는 세대는 3세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은 이주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이다. 주동석씨가 1963년 이주해 왔을 때 사자벌에 살던 사람들이 몇 가구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본인의 집도 사자벌에서 이주해 온 사람의 것이라 한다. 앞서 언급한 친구였던 박기봉은 주동석이 이사 올 당시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고 없었다.

귀환동포를 비롯한 초기 마을 사람들은 1960년대 초 마을 개간 당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대신해 주동석처럼 이웃 마을에서 이주해 오는 자들로 채워졌다. 그는 “얻어 먹어도 좀 느린데 가라”는 아버지 말에 따라서 이곳으로 왔다. 귀환동포가 접하는 정보와 실천력이 언양 지역에서 살아오던 사람들과 차이라고 생각된다.

마을 주민들의 고달픈 생활은 1965년 최경환 목사가 인근 지푸네에 있던 중남교회를 옮겨오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최목사는 마을 주민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닭을 키울 것을 제안했다. 마을 주민들은 빈터에 축사를 만들고 육계를 키우다가 판매망이 형성되지 못해 양계 사육으로 변경했다. 양계 이후에는 돼지를, 현재는 소 사육을 하고 있다. 양계를 시작할 당시 언양에는 달걀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동래시장까지 직접 팔러 다녀야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내장을 구입하여 닭 사료로 사용했다. 이처럼 마을이 경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도로변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조건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던 셈이다.

그러나 동물사육은 마을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 닭과 돼지의 분뇨는 마을의 위생을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마을 입구를 지나는 버스는 온갖 악

취와 날파리 때문에 정착하지 않았다. 이처럼 난민부락(난민부락) 이미지 때문에 인근 마을이나 행정기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한편 난민부락은 한때 '안전부락(안정부락)'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축산업을 시작하면서 '에텐협업농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0여 년 전 '에텐마을'로 바뀌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⁷⁶⁾ 마을 주민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으나 종교색을 띤 마을 명칭에 동의한 것은 현재 누리는 경제적 삶에 교회와 목사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울산 지역민들의 추방과 정착 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관계와 이에 대한 대응을, 귀환동포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울산 농민들의 해외 이주는 식민지 농정이 초래한 농촌경제의 몰락에서 비롯되었다.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소작권을 상실한 농민들은 일본 도항·밀항, 만주 이민과 같은 경계 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식민권력의 행정적 통제, 밀항 브로커의 착취, 일본 현지에서의 감시와 차별이라는 중층적 권력관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이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산을 처분한 이주민들은 고향으로의 귀환을 기약할 수 없는 모험에 내몰렸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주는 자발적 선택이기보다는 식민지 경제 구조가 강제한 생존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방과 함께 GHQ의 송환정책, 전쟁에 대한 공포, 일본인의 인종적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일조선인들은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다. 공식

76) '난민부락'은 피난민 마을이라는 의미의 '난민부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텐데 발음 나는대로 사용한 듯하다. 1983년 무렵에는 '안전부락'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이 명칭은 전금석이 만주에서 생활할 때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총독부가 만주 오지의 조선인 마을이 항일 세력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한 '안전농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연락선과 私船을 이용한 귀환 과정은 기뢰와 풍랑, 부당 요금 징수, 선상 폭력, 난파 사고 등 끊임없는 위험이 동반된 여정이었다. 귀국 이후에도 현금 반입 제한과 재산 통제, 극심한 식량난과 주거 부재라는 냉혹한 현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일부는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의 밀항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는 해방이 곧 안정적 정착을 의미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귀환동포가 처한 이중의 곤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울산으로 귀환한 동포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했다. 미군정과 경상남도는 도시에 집중된 귀환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황무지와 폐쇄된 비행장 개간을 내세운 농업이주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추진 단계부터 허위 홍보와 불충분한 지원이었다. 부산부 직원들이 ‘신천지’라고 선전했던 울산 삼남면의 이주지는 실제로는 척박한 황무지에 불과했으며, 약속된 물자 지원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기존 지역민과의 토지 분쟁, 행정당국의 무관심, 한국전쟁 이후의 구호 단절 등이 중첩되면서, 이주민 대다수는 결국 정착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신안마을과 예텐마을의 사례는 귀환동포가 정착과 이산을 반복하는 ‘棄民’적 처지로 내몰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귀환동포들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자조 조직을 결성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며 축산업을 일구는 등 능동적 대응을 멈추지 않았다. 예텐마을이 오랜 기간 ‘남민부락’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주변의 차별적 시선을 받았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일구어 낸 사실은, 끊임없는 이동과 배제 속에서도 생존을 도모했던 귀환동포의 집합적 의지와 능동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문헌

1. 자료

『中央日報』 『동아일보』 『조선일보』 『朝鮮時報』 『釜山日報』 『울산매일』
『부산신문』 『민주중보』
『G-2보고서』

三南面誌編纂委員會, 『三南面誌』, 2002.

鈴木久美, 『在日朝鮮人の「歸國」政策-1945~1946』, 東京:綠蔭書房, 2017.

2. 논저

기무라 겐지, 「關釜連絡船이 輸送史에서 차지하는 위치」, 『한국민족문화』 2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김 승, 「일제시기 밀항브로커의 활동과 밀항 과정에서 문제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8,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3.

_____, 「일제시기 조선인의 밀항 실태와 밀항선 도착지」, 『역사와 경계』 124, 부산경남사학회, 2022.

신주백, 「한인의 만주이주 양상과 동북아시아」, 『역사학보』 213, 역사학회, 2012.

이승희,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정책을 둘러싼 내무성과 조선총독부의 ‘갈등」, 『일본학』 53,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1.

_____, 「조선인의 일본 ‘밀항’에 대한 일제 경찰의 대응 양상」, 『다문화콘텐츠연구』 13,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2.

이연식, 「해방 직후 남한 귀환자의 해외 재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만주 ‘재이민’과 일본 ‘재밀항’ 실태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1946-1947-」, 『한일민족문제연구』 34, 한일민족문제학회, 2018.

임종명, 「부산·경남 지역의 콜레라 발병·만연과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 직후 동아시아 국제 정치」, 『역사와 경계』 126, 부산경남사학회, 2023.

조용욱, 「일본 내 한인의 ‘귀환’과 한국 내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해방 전 미국 측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3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 _____, 「일본 내 한인의 ‘귀환’과 한국 내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해방 전 미국 측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3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 차철욱, 「일제강점기 김해 지역 농촌의 식민지배와 농민의 일상」, 『지역과 역사』 46, (사)부경역사연구소, 2020.
- _____, 「해방 후 부산지역 귀환동포의 이주와 정착」, 『해항도시문화교섭학』 30,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4.
- 채영국, 「해방 후 재일한인의 지위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 최민경, 「‘디아스포라 공간’ 개념의 재고찰과 부산」, 『인문사회과학연구』 19(4),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 _____,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해방공간 부산」, 『동북아문화연구』 6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1.
- 최영호,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부관연락선과 부산』, 서울:논형, 2007.
- _____, 「韓人 歸還者の 눈에 비친 解放直後 부산의 이미지」, 『韓日民族問題研究』 20, 한일민족문제학회, 2011.
- 황선익, 「연합군총사령부(GHQ/SCAP)의 재일한인 귀환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6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우상용 구술(1943년생, 2024.02.03., 우상용 자택)

전강민 구술(1957년생, 2025.10.03., 전강민 자택, 전금석 아들)

주동석 구술(1938년생, 2025.08.26., 2025.10.02., 에텐마을경로당)

〈Abstract〉

**Expulsion and Resettlement of the Popular Classes
in Modern Ulsan**
- The Case of Repatriated Koreans -

Cha, Chul-Wook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processes of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experienced by the people of Ulsan from th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post-liberation era. The primary subject of analysis is Repatriated Koreans—Koreans who returned from Japan after liberation. These individuals constitute historical subjects who were compelled to repatriate to their homeland under the compounded structures of colonial rule and Cold War power dynamics. Within this problematic framework, the study establishes three analytical axes.

Ulsan farmers, having lost their livelihoods due to the collapse of colonial agricultural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compelled to choose among migration to Japan—whether through official channels or clandestine crossing—and emigration to Manchuria. In this process, they were exposed to a multilayered structure of power relations involving colonial authorities and smuggling brokers, among others. Following liberation,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was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combined effects of GHQ's repatriation policy, wartime fear, and racial antagonism from the Japanese populace; however, the process of return itself was likewise marked by a continuous sequence of danger and exploitation. Even after repatriation, Repatriated Koreans faced harsh realities, including food shortages, lack of housing, and restrictions on propert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promoted an agricultural migration policy that relocated Repatriated Koreans to wasteland in Samnam-myeon, Ulsan; however, this policy was largely a failure, owing to false propaganda,

insufficient support, and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leaving most settlers unable to establish stable residence. The cases of Sinan Village and Eden Village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the process by which Repatriated Koreans were reduced to the status of abandoned people(棄民). Nevertheless, these Repatriated Koreans did not remain passive in the face of such circumstances; rather, they actively sought to secure their survival through self-help organizations, collective land reclamation, and livestock farming.

* Key Words: Expulsion and Resettlement, Repatriated Koreans, agricultural immigration, Sinan Village and Eden Village, abandoned people(棄民)

· 논문투고일: 2026년 6월 8일 · 심사완료일: 2026년 7월 7일 · 게재결정일: 2026년 7월 13일
